



보건복지동향

보건복지부 보도자료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.

- 편집자 주 -

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

- 효율을 높이고 내실을 다지는 한 해 -

최선정(崔善政) 보건복지부장관은 2001년 1월 31일(수)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(중산층과 서민보호를 위한 보건복지 정책과제)을 보고하였다. 최장관은 지난 3년간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 평가하고, 이를 토대로 금년에는 보건복지 4대 개혁(의약분업·의료보험 통합·기초생활보장·연금확대)을 더욱 치밀하게 보완하여 제도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하면서, 금년에 추진할 12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.

■ 3대분야 12개 정책과제

- 1. 보건복지 4대 개혁의 정착:
 - 1)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
 - 2) 의약분업의 정착
 - 3)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
 - 4)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
- 2. 취약계층의 자활지원 강화:
 - 5)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
 - 6) 장애인의 자립촉진
 - 7) 아동 건전 육성 및 여성 사회참여 지원
 - 8) 민간복지의 활성화 도모

- 3. 보건의료의 발전:
 - 9) 국민건강수명 연장
 - 10) 의료공급체계의 개편
 - 11) 보건의료바이오산업의 육성
 - 12) 식품·의약품 안전관리 강화

○ 첫째,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

- 실질적인 최저생계가 보장되도록 생계·주거비 인상
(소득이 없는 4인가구 기준 72만 9천 → 84만 2천원, 15.5%)
- 보호누락을 막고 부적격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인 소득·재산조사 실시 등으로 수급자 엄정 관리
- 내년에 전면 실시할 예정인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차질없는 준비
- 조건부수급자 10만명에 대한 직업훈련·취업알선·자활공동체사업 등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자활·자립프로그램 제공 및 자활인프라 확충

○ 둘째, 의약분업의 정착

- 의·약·정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한 약사법령 조속 정비
- 담합·임의조제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『의약분업감시단』에 의한 단속 강화
- 『의약분업평가단』 운영을 통한 시행성과 점검 및 문제점 보완
-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국민·의료계·약계·정부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

○ 셋째,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

- 적극적인 보험재정 안정대책 추진(약가거품제거, 급여심사 등 사후관리 강화, 징수율 제고, 지역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)
- 소아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관련 고가약제·치료재료, 예방사업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
- 의료보호 1종 대상자 확대(적용연령 65 → 61세 등) 및 체불진료비 해소대책 추진

○ 넷째,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

- 수급자 관리 철저, 미신고자·납부예외자 축소 등 소득보장기능 강화
-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투자대상 다변화, 기금운용 전문인력 확충

○ 다섯째,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

- 노인의 잠재능력과 사회경험을 활용, 지역사회에서 합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'지역

사회 시니어클럽(CSC) 운영

※ 준법·교통지도, 상담, 자문 등 지역사회봉사 및 일거리마련을 통한 소득 창출

-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해 전문요양시설·치매병원 등 확충(121→148개소)

○ 여섯째, 장애인의 자립촉진

-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지원고용프로그램 실시(2만 4천명)

- 장애인생산물 판매촉진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, 인터넷쇼핑몰 개설 등 지원

-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 세금인상분 지원 및 정보화교육 실시

○ 일곱째, 아동 건전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

- 영아·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 확충 및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(128→147천명) 등을 통한 보육사업 내실화

- 학대아동 보호사업 내실화 및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미아 등 가족찾기사업 전개

○ 여덟째, 민간복지 활성화

- 장애인·노인요양·영유아시설 종사자 2교대 근무실시로 입소자 생활의 질 향상(360개 시설, 4,500명 추가 채용)

- 복권, 이벤트 모금 등 모금방식 다양화, 푸드뱅크 활성화 등 민간복지 자원 적극 활용

○ 아홉째, 국민건강수명 연장

- 암 조기발견을 위한 전국민 암검진체계 구축 등으로 현재 30%에 머물고 있는 암치료를 2005년까지 45%로 제고

- 금연구역 확대지정 등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, 성인남성 흡연율(현재 68%)을 2003년까지 55%로 감소

- 혈우병·고셔병·만성신부전증·근육병 환자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(7천명, 452억원)

- 취약전 아동 홍역접종 의무화 등을 통해 현재 40%에 불과한 홍역 2차 접종률을 95%로 제고(2005년 '홍역퇴치' 목표)

○ 열 번째, 의료공급체계의 개편

- 개방형병원제도(Attending System)의 활성화 유도, 국·공립병원과 보건소를 지역내 『지원의료센터』로 육성

-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치 및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류비

- 가정간호서비스비용은 기본방문료 19,000원과 진료행위별 처치료를 합산한 금액의 20%와 교통비 6,000원은 전액 본인부담함으로써 1회 방문당 적게는 9,800원을 부담하게 됨. 또한 월간 8회까지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입원대체서비스이므로 입원시와 동일한 진료비의 20%만 본인부담을 하게 되어 만성질환자 가정의 의료비부담을 경감시키게 될 것임.
- 따라서 가정간호사업은 가정에서도 치료의 지속성을 유지하고, 가족들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적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대폭 감소시키게 될 것임.

홍역퇴치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, 발표

보건복지부는 최근의 홍역 유행을 종식하고 우리 나라에서 홍역을 완전히 퇴치하고자 5개년 계획을 수립, 발표하였다. 이 중 일부는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,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태스크포스(task force)와 『국가홍역퇴치위원회』를 구성·운영하고 2005년도에는 '홍역퇴치'를 선언할 예정이다.

- 입학전 예방접종력 확인사업 : 금년도 취학아동에게 취학통지서와 함께 『2차 홍역 예방접종 통지서』 및 『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』 서식을 동시에 발부하여 입학전에 2차 홍역 예방접종을 맞도록 하고 예방접종증명서에 접종기관의 확인을 받아 학교에 제출하도록 함.
- 일제 임시 예방접종 : 유행 종식과 예방접종률의 대폭향상을 위하여 만 8세에서 14세 또는 17세 연령을 대상으로 2차 홍역 예방접종을 추진함. 전국적인 예방접종대상 규모를 확정하고 『임시예방접종』을 추진함.
- 향후, 환자발생에 대한 사례별 조사를 철저히 하여 발생기전과 발병 경로를 추적 조사함.

건강보험 고액환자에 약 1조 4천억원 지급

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연간진료비 500만원 이상 고액환자는 약 18만 6천

명으로 건강보험대상자의 0.4%에 불과하지만, 이들에게 지출된 보험급여비는 1조 3693억원으로 19.2%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. 고액환자 급여비가 이같이 높은 데는 건강보험 진료기간을 1994년까지는 연중 180일로 제한했으나 현재는 365일 제한없이 진료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급여확대 정책에 주력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. 그 동안의 급여확대 정책은 보험료 인상요인으로도 작용하였지만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려운 환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.

- 고액환자 최다 발생 질병은 남녀모두 ① 만성신부전이며, 다음으로 남자는 ② 위암 ③ 간암 ④ 폐암 ⑤ 심근경색증, 여자는 ② 대퇴골의 골절 ③ 기타척추병증 ④ 위암 ⑤ 무릎관절증 순임. 대체로 남자는 각종 암과 뇌출혈 등 순환기계질환이 많고, 여자는 대퇴골의 골절 등 근골격계질환이 많았음.
- 전국 최고액은 '고서병'으로 불리는 대사 및 지질축적장애환자(20세, 여자)로 병원진료비 1억 8942만원 가운데 급여비 1억 5150만원이 지급되었는데, 이는 약 5,870가구(17,900명)의 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임. 1억원 이상 고액급여자는 3명인데 모두 성공적인 치료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.

2001년도,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

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기준을 작년에 비해 200만원씩 상향조정하는 등 수급자격을 완화하고, 급여내용을 확충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을 발표했다.

- 2001년도 수급자 재산기준은 그동안의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1~2인가구는 3100만원, 3~4인가구는 3400만원, 5인 이상 가구는 3800만원으로 결정함. 소득기준은 작년 12월 1일 공표한 2001년도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1인가구 33만원, 2인가구 55만원, 4인가구 96만원 등으로 결정됨.
- 또한,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며, 부양능력이 다소 있는(미약한) 경우에는 일정액의 생활비(부양비) 지원을 전제로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으나, 2001년도에는 부양의무자가 지원해야 할 부양비

비율을 작년에 비해 낮추는 대신(최저생계비의 120%를 초과하는 소득의 50 → 40%) 국가의 지원부분을 확대했으며, 특히, 출가한 딸인 경우는 현실적으로 친정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, 부양비 수준을 대폭 하향조정함(최저생계비의 120%를 초과하는 소득의 30 → 15%).

- 한편,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공공근로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, 다른 급여는 중지하고 해당 자활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보호하고 있으나, 의료·교육급여가 중지되므로 가구원 중에 만성질환자나 학생이 있는 경우는 자활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, 금년부터는 자활급여특례자 중에서도 의료·교육급여가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해당 급여를 계속 지급하기로 함.

■ 2001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, 주거비 등의 급여수준도 크게 향상됨.

- 소득이 없는 4인가구가 받는 현금급여(생계비 및 주거비)의 경우 작년도에는 월 72만 9천원이었으나, 금년에는 84만 2천원으로 약 11만 3천원(15.5%) 증가하게 됨.

※ 2인가구의 경우 43만 3천원에서 48만 2천원으로 11.3% 증가

■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예산은 총 2조 7900억원으로 작년도(2조 3300억원)에 비해 약 4600억원(20%)이 늘어난 수준임.